



주간 통일정세

2012-4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中 후진타오에 정권수립 기념 축전(10/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정권 수립 63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이 통신이 이날 공개한 축전 전문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해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밝힘.
 - 또한, 김 제1위원장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재부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우리(노동)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전통적인 조중친선 협조관계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전함.

- **北, 국가안전보위부에 김정일 동상 건립(10/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건립하고 2일 제막식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전함.
 - 이 방송은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이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에 건립됐다"며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을 군부대에 모신 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전체 장병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밝힘.

- **北인민보안대학, 김정일인민보안대로 개명(10/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체제보안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인민보안대학을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개명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전함.
 -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이 그의 이름을 넣어 학교명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우상화와 정권에 대한 주민의 충성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보답하는 학교 관계자, 학생 등의 결의모임이 5일 있었다고 소개함.



- **김정은, 보위부서 불순 적대분자 색출지시(10/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를 방문하고 강도 높은 적대분자 색출작업을 지시했다고 7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보위부에 새로 세워진 김정일 동상을 찾아 둘러보고 "장군님(김정일)의 동상을 단독상으로 모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된다"며 김정일 동상을 보위부에 먼저 세우게 한 것은 보위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신임의 표시라고 말함.
 - 이어 "보위부는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나 양보는 곧 죽음이며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인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며 "원수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 책동을 단호히 짓부쉬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고 어리석게도 탄 꿈을 꾸는 불순 적대분자들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짓밟게 버려야 한다"고 지시함.
 - 그는 또 보위부 지휘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데서 보위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적들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대중을 갈리놓으려고 책동하는 조건에서 보위부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쉬버리기 위한 책략을 바로 세우고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5주년 기념 보고대회(10/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1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보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을 이끌어 김일성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근본 초석을 마련했으며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 부강조국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다"고 말함.
 - 이어 "그이(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도에 의해 노동당의 권위와 위력은 비상히 높아지고 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라며 "전당과 온 사회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의 두리(주위)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10/4, 김정은 黨 제1비서, 9월 13일과 27일 단천지구광업총국 등 여러단위 일꾼·근로자·교직원·학생들에게 '친필' 전달(10.4, 중통)
- 10/5, 김정은 黨 제1비서, 10.5 80회 생일을 맞은 김용수(비전향장기수)에게 생일상 전달(10.5, 중통)
- 10/7,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안전보위부에 세워진 김정일 동상 및 만경대유회장과 대성산유회장 시찰(10.7, 중통·중방)
 - 최룡해 동행,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대장), 김창섭(보위부 정치국장/상장) 등 영접

■ **기타 (대내 정치)**

- 개천절 기념행사, 10.3 김영대(「민화협」 회장/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류미영(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천도교청우당 위원장)·강련학(「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등 참가下 단군릉 앞에서 진행(10.3, 중통·중방)
- 최룡해 총정치국장, 만경대유회장·통일거리운동센터 등 평양시 여러 대상 건설정형 현지요해(10.6, 중통)

나. 경제

● **北자강도 희천발전소 평양시에 직접 전기 공급(10/3, 조선신보)**

- 북한 자강도에 올해 4월 완공된 희천발전소가 평양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이날 '희천발전소, 수도에 전문적으로 공급'이라는 평양발 기사에서 "(희천)발전소는 수도(평양)에 전문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로 규정되고 있다"며 "생산된 전기의 전량을 평양에 직접 보내고 있다"고 소개함.
- 또한, 신문은 "발전소에서 평양까지 이르는 송전선도 동시에 꾸려졌다"며 "새로 설치한 송전선을 통해 희천에서 직통으로 전기가 (평양에) 들어옴으로써 주파수와 전압이 안정된 전력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北 쌀값 6개월째 올라 역대 최고 수준(10/7, 데일리NK)**

-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6개월째 고공행진을 거듭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북매체인 데일리NK가 7일 전함.
- 데일리NK가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1천300~2천200원(북한 원화 기준) 올라 각각 6천800원, 6천500원, 6천300원을 기록함.



- 미국 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 역시 전달보다 970~1천260원이 오른 6천370(평양)~6천500원(혜산)으로 집계됨.

다. 군사

- **北, 안보장관회의 다음날 단거리미사일 발사(10/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린 다음 날 서해안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4일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안남도 서해안에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서해 상으로 80~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또한, 이 소식통은 "당시 시험발사가 일상적인 성능개량 일환일 수 있지만 시점상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함.
 -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달 27일 이전에도 서해와 동해에서 지대함 등 단거리미사일을 4~5차례 이상 시험발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합정을 겨냥해 단거리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하고 폭약 성능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9월 식량배급량, 유엔 권장량 절반 수준(10/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지난달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310g으로 지난 8월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9월 식량배급량은 전년 동기의 200g에 비해 55% 증가한 것이지만, 올 상반기 평균 393g보다는 21% 감소한 것으로,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51.7%에 불과하다고 밝힘.
- **北 60세 이상 인구, 40년 후 두 배로 증가(10/3, 연합뉴스)**
 - 북한의 60세 이상 노인이 40년 후에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유엔인구기금(UNFPA)은 3일 '21세기의 고령화 보고서'에서 2012년 현재 332만1천명인 북한의 60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는 612만8천명으로 두 배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전체 주민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은 올해 13.5%에서 2050년에는 2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인권 탄압 지속(10/5,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하에서도 북한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고 유엔이 밝힌 것을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6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으며, 다르스만 보고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승계 이후에도 북한의 암울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가을 작황 안 좋아...식량상황 악화 (10/5,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FAO는 지난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식량상황이 이 단체가 지난 6월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더욱 악화했다고 밝힘.
- **北, 외국 웹사이트 하루에 1만건 검색(10/6, 자유아시아방송(RFA))**
 - 인터넷 폐쇄국가인 북한이 하루에 1만건 정도 외국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정보통신환경 분석업체인 '스탯카운터(Statcounter)'는 최근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인터넷과 무선통신으로 하루에 외국 웹사이트를 접속하거나 검색한 건수가 1만건 가량 된다고 밝혔으며, RFA는 "한국의 1억건과 미국의 42억건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북한에서도 외국 웹사이트에 대한 활발한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일본인 유족에 종전 후 첫 묘 참배 허용(10/1, NHK)**
 - 북한이 일본인 유족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묘 참배를 허용했다고 NHK방송이 1일 보도함.
 - 일본인 유족 16명은 묘 참배를 위해 지난달 29일 평양에 들어갔으며, 30일 북한 외무성 관계자의 안내로 과거 일본인 거주지를 둘러봤고, 이날 평양에서 발견된 일본인 유골 매장지인 '용산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고 전함.
- **北외무성부상 "세계적 추이 맞게 경제구조 개선중"(10/2, 조선중앙통신)**
 - 제67차 유엔 총회에 북한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최근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경제구조와 발전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이 통신은 2일 "9월28일 77개집단 외무상회의에서 조선대표단 단장(박



길연 부상)이 연설했다"며 "그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이에 부합되게 자체실정에 맞는 경제구조와 발전방식을 부단히 개선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박 부상은 이어 "(북한 정부가)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北에 밀가루 2천t 추가 지원(10/2,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가 태풍 등으로 수해를 당한 북한에 밀가루 2천t을 추가 지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일(현지시간) 평양발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밀가루를 실은 러시아 선박이 함경북도 청진항에 도착했으며 함북도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대표단 등이 구호물자를 수령했다고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 바체슬라프 추피코프가 밝힘.

● 中 다롄서 항공편 금강산 관광 시작(10/2, 조선중앙통신)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북한 금강산 유람에 나서는 관광 상품이 도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중국 다롄부려화국제여행사유한공사의 김춘일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비행기에 의한 다롄-금강산국제관광단'이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며 "관광단은 금강산을 유람하고 평양시와 개성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게 된다"고 전함.

● 北청진-러시아 하버롭스크 협력발전 의정서(10/3, 러시아의 소리방송)

- 러시아 하버롭스크의 알렉산드르 소코로프 시장이 북한 함경남도 청진시를 방문해 하버롭스크와 청진시 사이의 '협력발전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3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바체슬라프 추피코프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의 언급을 인용해 "의정서에 따라 쌍방은 대표단, 예술단, 체육단을 교환할 것"이라며 "소코로프 시장의 청진 방문기간에 두 도시 사이의 경제·관광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밝힘.

- 소코로프 시장은 올해 러시아를 방문한 임천일 북한 외무성 국장을 만났고 북측 관계자들은 평양에서 북한 상품들을 소개하도록 하버롭스크 기업가들을 초청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中, 농업부문 협력 양해각서 체결(10/4, 조선중앙통신; 로이터통신)

- 북한 농업성과 중국 농업부가 4일 평양에서 농업부문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이날 양해각서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리석철 부상 등 농업성 간부들이, 중국 측에서는 뉴둔(牛盾) 부부장 등 중국 농업부 대표단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북한과 중국의 농업부문 양해



각서 체결은 최근 북한에서 농업개혁 움직임이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고 밝힘.

-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고 전함.

● **북-러, 노동자 파견 의정서 조인(10/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재외파견 노동자의 노동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그룹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이 통신은 "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상대방) 국가 국민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실무그룹(그룹) 제3차회의 의정서가 5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밝힘.

● **북한 경제 사절단, 스웨덴서 '시장경제' 수업(10/5, 스웨덴 공영 라디오 방송)**

- 25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기업 및 무역 사절단이 2주 일정으로 스웨덴을 방문했다고 스웨덴 공영 라디오 방송이 5일 보도함.
- 이번 방문은 스웨덴산업국제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wedish Industry)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스웨덴 경제를 배우고 기업, 은행, 국가기관을 견학하려는 목적이며 사절단은 주로 대학, 국영 수출기업,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 내년 4월 北에 풍력발전기 준공(10/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개발계획(UNDP)이 내년 4월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에 소형 풍력발전기의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이 방송은 유엔개발계획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UNDP가 이달 15~20일 북한의 공사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풍력발전기 설치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소개함.



■ 기타 (대외 일반)

- 일제의 '조선총독부' 설치(10.1) 관련 "조일관계가 개선되자면 일제의 과거죄악이 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며 '일본의 과거청산 용단' 촉구(10.1, 중통·노동신문/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 '77개 집단 외무상회의'(9.28, 유엔본부)에서 '△공평한 국제무역질서와 금융체계 확립, △유엔개혁, △남남협조와 77개 집단 성원국들의 단결과 연대성 강화' 등 주장(10.1, 중통·중방)
 - 北대표 단장도 연설에서 '北은 앞으로도 정의와 평등,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관계 수립을 위한 77개 집단의 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 강조(10.2, 중통)
- 北 대표단장, 10.1 유엔총회 제67차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성원국들의 노력에 합세,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핵문제는 未해결, △反통일세력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책임적 노력을 다할 것' 등 주장(10.4, 중통·중방)
- 중앙통신사 논평(10.3), 미국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침략적 행정책의 근본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北)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10.3, 중통/세계적인 핵위협과 군비경쟁의 장본인)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중북교육' 비난 대남전단 대량살포(종합)(10/2, 연합뉴스)
 - 북한이 국방부의 '중북교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대남 전단(빠리)을 대량 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9일 저녁 북한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날아오는 기구(氣球)를 관측했다"면서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아침 기구가 떨어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군 일대를 수색한 결과 대남 전단 1만6천~1만7천여장을 발견했다"고 밝힘.
 - 이 대남 전단의 한 면에는 '중북교육은 독재옹호 교육' 등의 문구가, 다른 면에는 조봉암·장준하 선생 등 5명의 인물 사진과 함께 '국방부의 중북 교육은 이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는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보도함.
- 北 "10·4선언 태도가 통일·반통일 나눌 시금석"(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남북공동선언인 '10·4선언' 5주년을 맞은 4일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



금석"이라고 주장함.

- 이 통신은 이날 '북남관계파탄의 5년은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공동선언의 이행에 민족이 살 길이 있고 통일과 평화변영의 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또한 6·15선언, 10·4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이 흐지부지된 것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이명박 역도의 비참한 운명은 반공화국 대결로 얻을 것이란 파멸뿐이며 우리 민족끼리아말로 겨레의 지향이고 역사의 진리임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南 차기정권 남북선언 존중시 北 호응(10/5,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남한의 차기 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평화 변영에 대한 기대와 확신: 10·4선언 발표 5돌, 평양의 여론'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남측의 다음 정권이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려 한다면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것이며 민족의 평화변영을 위한 실천적인 후속조치들이 끊임없이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을 것이라고 연설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미 4·15열병식 연설을 통해 북의 변함없는 통일의지가 표명됐다"고 덧붙임.

● 북한軍 초소서 '탕..탕..'4분 만에 南으로 귀순(10/7, 연합뉴스)

- 남측 초소와 불과 500m 거리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북한군 1명이 6일 낮 상관을 사살하고 귀순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한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 군은 사건 발생 불과 4분여 만에 북한군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귀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함.
- 이날 낮 12시6분께 경기도 파주의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북측 초소에서 6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일대는 긴장감에 휩싸였고 순간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측 초소와는 불과 500m 거리의 지척에 있던 우리 군의 경비초소에도 긴박감이 감돌았음.
- 총성과 함께 전방을 주시하던 우리 측 초소의 경비병이 화성기로 "귀순자냐?"고 물었고, 북측 병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MDL을 넘어 우리 측 초소로 뛰어들었고, 우리 군은 4분여만인 낮 12시10분께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함.
- 그는 귀순 후 우리 군에 "경계근무를 하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우리 군은 사건 직후 북측이 초소에서 북한군 2명을 옮기는 장면을 관측했는데 북한군 초소에는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강화함.

■ 기타 (대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李大統領의 '국군의 날' 기념사(9.26, 北이 핵과 미사일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東北亞지역이 도전을 받고 있음)에 대해 '한반도와 東北亞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 조성 책임을 北에 넘겨써워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술책'이라고 비난(10.1,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李大統領의 民主平統 해외 자문위원들과 다과회(9.25, 청와대) 발언(누가 지금 북한에 쳐 들어가지 않는 데 국방력 강화로 국민소득 하락 등)은 '北 미사일발사 비용문제 거론 再版'이라고 비난(10.1, 중통)
 - 民主平統 해외 자문위원들 청와대 초청행사 및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국군의 날 기념사 對北 발언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몽매한자의 발광적 추태"라고 재차 비난 (10.1, 중통·노동신문·평방/가려한 산송장의 발광적 추태)
- 南 개천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와 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 10.3 개천절 기념 '南北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악화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강조(10.3, 중통)
 - 첫째, 우리는 단군민족의 자존으로 자주성을 찾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자주·자강·자립의 정신과 원칙으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모든 대립과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 중앙통신사 상보(10.4), '10.4선언' 발표 5돌을 맞으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며 '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우리의(北)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10.4, 중통/북남관계 파탄의 5년은 고발한다)
- 北 「조평통」 대변인(중통기자 문답), 10.4 대통령과 「합참」의 장·국방부장관 등 '北 도발가능성' 발언 등은 '우리(北)를 자극하여 충격적사건을 조작하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수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의도적인 모략도발"이라고 왜곡 비난(10.4, 중통·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및 6자회담

- **정부, 박길연 주장 일축.. "北 핵개발 중단 희망"(10/2, 연합뉴스)**
 - 정부는 2일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남한 탓으로 돌린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반박함.
 -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부상의 기조연설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북한 측의 이 발언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임을 잘 알 것"이라면서 북한 측 주장을 일축함. 조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핵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함.
 - 박길연 부상은 1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현 남한 정부는 집권 이후 6·15 남북 공동성명과 10·4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 하면서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함.
 - 그러나 남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유엔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음.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이달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위원회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현인택 "北核해결 안되면 남북관계 개선 없어"(10/4, 연합뉴스)**
 - 대통령 통일정책특보인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은 4일 "북한 문제의 핵심은 핵 문제"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한다."고 주장함.
 - 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김정은 체제 권력 구도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 정책전망' 학술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대북정책의 근본목적은 단순히 남북관계를 여는 데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우리가 거의 20여 년간 북한 핵개발과 씨름해왔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그 무게만큼 우리 사회에서 느껴지는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에 눈을 감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간다고 한들 그 시곗바늘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지적함.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



- 며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에 주의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함.
- 현 전 장관은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관련, "겉보기와 달리 권력 내부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해 절대 권력자로서의 기반이 훨씬 약하다는 것이 오늘날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함. 특히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권력 불안정성이 경우에 따라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점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대선국면 등) 대외적 요인을 끌어들이어 대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나. 미·북 관계

● "미국의 북한 적대로 핵전쟁 직전"(10/2, 경향신문)

-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현지시간)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상황에 봉착했으며 북한의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함.
- 박 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대결과 긴장 고조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불씨 하나로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했다"면서 "미국의 적대정책에는 북한 국민이 선택한 사상과 체제를 파괴함으로써 한반도를 아시아 지배 야욕의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함.
- 박 부상은 이어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한국전쟁의 시나리오를 이미 완성했고 현재 실행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이 시나리오는 유사시 북한을 침략해 군사정권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함. 그는 미국의 군사 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막은 것은 북한의 자위적 전쟁 역지력이었고 한반도의 현실은 선군정책을 통해 전쟁 역지력을 확보한 것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핵개발을 정당화함.
- 박 부상은 또 "현 남한 정부는 집권 이후 6·15 남북 공동성명과 10·4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면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며 남측을 비난했다. 그는 "남측은 최악의 국가적 손실을 겪은 북한 주민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고 굴욕감을 안겨주는 정치적 테러마저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산했다"고 말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박 부상이 지난달 28일 유엔 산하의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77그룹' 외교장관회의에서 한 연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박 부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세계 추이에 부합되게 경제구조와 발전방식을 개선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미국, 北 유엔 연설에 "김정은 선택 지켜보는 중"(10/3, SBS)
 - 북한이 유엔 연설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건 한국과 미국 탓이라고 주장함.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늘 하는 주장이라 연설을 보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김정은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함. 이는 북한 측이 늘 하는 얘기여서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임. 또 북한의 자제를 거듭 촉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핵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함.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피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다. 중·북 관계

- 北 김정은, 中 후진타오에 정권수립 기념 축전(10/1,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정권 수립 63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축전 전문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해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또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재부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우리 (노동)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전통적인 조중친선 협조관계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함.
 - 이번 축전은 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가 후 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공동 명의로 보낸 것임.
- 北-中, 농업부문 협력 양해각서 체결(10/4, 연합뉴스)
 - 북한 농업성과 중국 농업부가 4일 평양에서 농업부문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날 양해각서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리석철 부상 등 농업성 간부들이, 중국 측에서는 뉴둔(牛盾) 부부장 등 중국 농업부 대표단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함. 뉴둔 부부장 등 중국 농업부 대표단은 전날 평양에 도착함. 북한과 중국의 농업부문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북한에서 농업개혁 움직임이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됨.
 -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농민들



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고 전함. 또 북한 황해남도 농장 일꾼은 지난달 23일 AP통신에 새 지침에 따라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잉여농산물을 자신들이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면서 8월 모임에서 새 지침을 통보받았고 이 규칙은 올해 추수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 일본인 유족에 종전 후 첫 묘 참배 허용(10/1,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유족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묘 참배를 허용함. 1일 NHK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에 남았다가 숨진 일본인 유족의 묘 참배를 처음으로 허용함.
- 일본인 유족 16명은 묘 참배를 위해 지난달 29일 평양에 들어갔으며, 30일 북한 외무성 관계자의 안내로 과거 일본인 거주지를 둘러봤고, 이날 평양에서 발견된 일본인 유골 매장지인 '용산묘지'를 방문해 참배함. 용산묘지에는 2천400구의 일본인 유골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방문단 단장인 사토 도모야(佐藤知也, 80)씨는 "전후 6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의 묘 참배는 유족으로서 한 획을 그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북한 당국은 일본인 유골 반환과 참배와 관련 유족의 방문을 수용했으며, 일본 언론 매체의 취재도 허용함.
-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적극적 자세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음. 북한은 지난 8월 말에도 일본인 유골 수습을 요구해온 일본 민간단체 '전국청진회(全國淸津會)' 회원들의 방북을 허용했으며 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과 정부 간 대화(과장급)에 응하기도 함. 북한과 일본은 8월 말 과장급 대화 당시 회담을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일본인 유골반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교섭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하기로 합의함.

● 日 對北외교 파행...외무성·납치본부 '엇박자'(10/5, 연합뉴스)

- 일본의 외무성과 납치문제대책본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따로 전개해 파행을 빚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지난 8월 말 일본과 북한의 외무성이 과장급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도 비공식적으로 북한 측과 접촉함. 외무성과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북한 접촉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나 공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대북 교섭 창구가 누구인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함.
- 일본 외무성은 8월 29~31일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북동아시아 과장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해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과 접촉함. 같은 시기에 납치문제대책본부도 마쓰바라 진(松原仁) 당시 납치문제담당



상 겸 공안위원장이 직원 3명을 베이징에 보내 북한 측과 만남.

- 납치문제대책본부 직원들은 8월 30일 베이징 북한대사관 옆에 있는 북한음식점에서 유성일 과장을 만나 마쓰바라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전향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청함. 마쓰바라 납치문제담당상은 북한과의 과장급 협의에 납치문제대책본부 직원의 동참을 요구했으나 외무성이 받아들이지 않자 독자적으로 직원을 파견함. 뒤늦게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외무성은 '마쓰바라의 이월 외교'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마쓰바라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1일 개각에서 퇴진함.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北에 밀가루 2천t 추가 지원(10/2, 연합뉴스)

- 러시아가 태풍 등으로 수해를 당한 북한에 밀가루 2천t을 추가 지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일(현지시간) 평양발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밀가루를 실은 러시아 선박이 함경북도 청진항에 도착했으며 함북도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대표단 등이 구호물자를 수령했다고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 바체슬라프 추피코프가 밝힘.
- 추피코프 총영사는 올 7월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선박이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약 6천200t의 밀가루를 극동 나홋카항에서 청진항으로 실어 날랐다고 설명했다. 밀가루는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의 제과공장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함. 북한의 여러 지역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폭우와 홍수, 태풍 등으로 심각한 수해를 입었음.

● 북-러, 노동자 파견 의정서 조인(10/5,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재외파견 노동자의 노동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그룹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상대방) 국가 국민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실무그룹(그룹) 제3차회의 의정서가 5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밝힘.
- 의정서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이, 러시아 측에서 아나톨리 쿠즈네초프 부국장 등 러시아 연방이민국 대표단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함.
- 현재 러시아에는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임업,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6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를 1만5천~2만 명 정도로 추산함. 현재 러시아 아무르주에는 벌목 등 임업 분야에 1천500명, 건설 분야에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 러시아 사할린주(州)의 콘스탄틴 스트로가노프 제1부지사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지난해 사할린주



에서 일한 북한 노동자는 3천400명이며 이들은 주로 건설, 도·소매, 자동차 수리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바. 기 타

● <북한軍 초소서 탕..탕..4분 만에 南으로 귀순>(10/6, 연합뉴스)

- 남측 초소와 불과 500m 거리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북한군 1명이 6일 낮 상관을 사살하고 귀순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한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음. 우리 군은 사건 발생 불과 4분여 만에 북한군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귀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 6발의 총성 후 南으로 질주..4분 만에 귀순-이날 낮 12시6분께 경기도 파주의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북측 초소에서 6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일대는 긴장감에 휩싸였음. 갑작스러운 총성으로 평소 우리 측 차량과 인원이 개성공단을 오가던 길목의 평온함이 깨진 것임. 순간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측 초소와는 불과 500m 거리의 지척에 있던 우리 군의 경비초소에도 긴박감이 감돌았음. 총성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측 초소에서 나온 북한군 1명이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함.. 소총은 버리고 비무장 상태였음. 총성과 함께 전방을 주시하던 우리 측 초소의 경비병이 확성기로 "귀순자냐?"고 물었고, 북측 병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 귀순자는 MDL을 넘어 우리 측 초소로 뛰어들었고, 우리 군은 4분여만인 낮 12시10분께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함.
- 그는 귀순 후 우리 군에 "경계근무를 하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실제 우리 군은 사건 직후 북측이 초소에서 북한군 2명을 옮기는 장면을 관측했음. 북한군 초소에는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 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강화함. 단순 귀순이 아닌 북한군이 상관을 살해하고 내려온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임.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도 즉각 위기조치반을 가동했고,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즉각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점검함.
- 북한군의 특이동향도 포착되지 않았음. 사건 직후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우리 측 입주기업 관계자 300여명도 당초 예정대로 오후 2시와 2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남측으로 무사히 내려왔음. 다만, 오후 2시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우리 측 기업관계자 2명은 북측으로의 출경을 취소함. 그러나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군 귀순사건이 혹시라도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과 북한군의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최근 10년 동안 MDL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북한군은 총 5명임. 2002년 2월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AK 소총 2정을 휴대한 채 경의선 도라산역 인근 서부전선을 넘어 귀순함. 2008년 4월에는 북한군 장교



1명이 판문점 인근으로 귀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부사관 1명이 강원도 철원군 철책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힘. 2010년 3월에는 북한군 부사관 1명이 동부전선 MDL을 넘어 우리 측의 품에 안겼음.

- 경의선 도로에 MDL를 사이에 두고 우리 측과 불과 500m 거리의 북측 초소에는 검증된 병력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관까지 사살하고 귀순한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군 소식통은 "북한군의 기강해이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잇따라 전방지역을 시찰한 이후 전방부대에 가해지는 압박이 강해진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함.
-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들은 귀순자를 상대로 합동신문을 벌이고 있으나 귀순 동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화생방 제독부대' 9년 만에 한국 재배치(10/6, 연합뉴스)**
 - 미국이 주한미군 '10대 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후방지역 화생방 제독(오염처리)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하면서 2004년 철수했던 화학대대를 9년 만에 한반도에 재배치하기로 함.
 - 미 육군성은 내년 3월까지 제23화학대대를 미국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캠프 스탠리로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6일 전함. 이 화학부대는 290여명 규모로 예하에 3개 화학 중대로 구성돼 있으며, 화생방 탐지·정찰·제독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번 화학부대 재배치는 한반도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미군 측은 설명함.
 -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군 부대의 재전개는 이례적인 일로 최근 주한미군의 전력강화와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6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서 사용한 특수지뢰방호차량 'MRAP(엠랩·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78대를 부산항으로 들여옴. 주한미군 관계자는 "앞으로 300여대의 MRAP이 더 한국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힘. 주한미군은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폭탄인 엑스칼리버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패트리엇-3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도 추가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오늘 오후 발표 (10/7, MBN)**
 - 한미 간 타결된 미사일 지침 개정안이 오늘 오후 발표됨.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미사일 사거리는 800km까지 늘어나 북한도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최신 탄도 미사일인 현무2의 사거리는 300km임. 사거리가 6천km로 추정되는 북한 대포동 2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함.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벌였고, 마침내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사거리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함.
- 유사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며 미래전의 핵심 무기인 무인 항공기 탑재 중량도 현재 500kg에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무인 정찰기 개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계임. 그러나 탄두 중량은 현행 500kg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청와대는 오늘 오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타결된 미사일 협정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나. 한·중 관계

● 올해 中 관용기 이어도에 14회 출현 (10/5, 연합뉴스)

- 올해 들어 중국의 관용기와 관공선, 해군 함정이 이어도에 출현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합동참모본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 헬기 등 중국의 관용기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14회 이어도 상공에 출현함.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의 관용기가 우리 공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횟수는 2010년 2회, 2011년 7회였음. 중국의 관공선과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 해상에 출현하는 횟수도 2009년 14회, 2010년 16회, 2011년 39회, 올해 1~9월 48회로 매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음. 중국이 최근 관용기와 관공선 등을 우리 해양기지가 있는 이어도에 자주 보내는 것은 관할권을 둘러싼 우리 정부와의 신경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됨.
-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기로 하면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함. 그러나 중국의 관용기와 관공선이 출현하더라도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임. 특히 이어도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내에 있어 우리 항공기와 함정이 이어도 쪽으로 진입하려면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군의 한 소식통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하면서 당시 수중 암초였던 이어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1963년 일본이 JADIZ를 설정하면서 이어도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전함. 정부는 일본 측에 이어도가 KADIZ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



로 알려짐. 소식통은 "우리 군은 1959년 작전구역(AO)을 설정하면서 이어도를 AO내에 포함해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71회),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12회), 일본의 KADIZ 무단진입(1회) 등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하늘과 바다를 통한 우리 '영토 위협'은 146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정희수 의원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측의 우리 영토 위협은 2008년 97회, 2009년 105회, 2010년 126회, 지난해 148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변 열강의 위협에 좀 더 강력히 대응해 우리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 한·일 관계

● 정부, 유엔서 對日 압박수위 더 높인다(10/1, 연합뉴스)

-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일(對日)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함. 정부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오는 3일부터 열릴 예정인 유엔 제3위원회에서는 '일본'과 '위안부'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일본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할 예정임.
- 정부 당국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권·여성 분야를 주로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는 과거에도 직접 언급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강한 톤으로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함.
- 이에 앞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8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문제', '전시 성폭력'이란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피해자 구제와 배상, 가해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섬. 외교적 관례를 고려해 '일본'과 '위안부'란 단어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 것임.
- 정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와 여성 문제를 다루는 올해 제3위원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과 '위안부'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임. 정부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법적인 책임이 없고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본의 법적 책임도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지난해에도 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를 통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향상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며 '일본'과 '위안부'란 용어를 직접 사용함.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제여론을 동원해 일본을



더욱 압박할 방침이라고 전함.

● **日방위상 "독도 주변 공해 자위대 훈련 문제없다"(10/5, 연합뉴스)**

-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 헬리콥터의 독도 주변 공해상 훈련과 관련,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함. 이 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5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대 헬리콥터가 지난달 한국의 독도 부근 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함선 이착륙 훈련을 한 것과 관련, "독도에 접근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해상에서의 훈련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함.
- 모리모토 방위상에 의하면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훈련은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의 공해상으로 향하기 위해 동해를 북상 중이던 호위함에서 행해졌음. 모리모토 방위상은 한국군의 해상초계기(PC3)와 F15 전투기가 접근했지만 대(對) 영공 침범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통상적인 경계 감시 활동으로 보였다고 전함. 또 한국으로부터 헬리콥터의 비행 목적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는 없었으며, 전투기로부터 경고도 없었다고 밝힘.
- 한국군 소식통은 4일 "일본의 4천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이 지난 달 21일 독도 동쪽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우리 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태왕함을 출동시켰다"며 "일본 구축함은 우리 측의 통신 검색 후에 예정된 항로로 물러갔다"고 밝힘.

라. 미·중 관계

● **미, F35 오키나와 배치 '중국 견제'(10/4, 경향신문)**

- 미국이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사진)를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嘉手納)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로 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팽창을 가속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은 3일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전제로 F-35를 오키나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함. 가네다 기지에는 현재 F-22 전투기들이 잠정 배치돼 있음. 교도통신은 "F-35의 가네다 기지 배치는 군비팽창을 지속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전함.
- 카터 부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재균형 전략이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미국이 아·태 재균형 전략에 재원을 공급하고 공약을 이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21세기 미 해군 주력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공중급유기, 스텔스 폭격기 등 향후 아·태 지역에 신규 배치할 시스템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힘. 또 호주에 해병대 병력 2500명을 순환 배치하고, 싱가포르에 연안 전투용 전함 4척을 배치할 것이라고



소개함. 그는 "재급유 없이 대륙항단을 할 수 있는 B-1 폭격기도 아·태 지역에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말함.

- 카터 부장관은 그러나 아·태 재균형 전략이 '중국 봉쇄'의 일환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일부 중국 친구들에게 앞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의 움직임은 협조적인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아울러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은 해당 해역의 항해와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힘.

● 키신저, 두 후보 중국 때리기 경쟁 개탄(10/5, 중앙일보)

- 헨리 키신저(89)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대선 후보들의 경쟁적인 '중국 때리기'에 쓴 소리를 함. 키신저 전 장관은 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중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 측의 중국 비판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함. 그는 "미국과 중국은 적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하는 나라들"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세계 질서의 안정도 거기에서 온다."고 말함.
- 지난달부터 오바마와 롬니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TV 대선 광고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비판해오고 있음.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을 겪어본 적도 없는 일부 이론가가 이런 일들을 마치 십자군 전쟁을 하듯 하고 있다"며 "두 후보가 중국에 대해 사용하는 거친 언어들만 개탄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음. 1971년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 미·중 수교의 길을 틔운 키신저 전 장관은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을 겨냥해 경쟁적인 비판을 해온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여 왔음.
- 공화당 정부에 몸담았던 키신저 전 장관은 롬니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했지만 롬니가 대통령이 될 경우 중국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겠다고 하는 등 반중국 정서를 보이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마. 미·일 관계

● 日오키나와에 수직이착륙기 배치..주민 반발(10/1, 연합뉴스)

- 주일미군이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신형 수직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6대를 배치하자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함.
-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스프리 6대가 이날 오전 11시10분~11시50분 사이에 차례로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에 착륙함. 오스프리는 7월23일부터 야마구치현 이와쿠니(岩國)기지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키나와로 이동함. 2일 이후에 6대가 추가로 이동·배치될 전망이다. 오스프리는 앞으로 시즈오카현 캠프 후지와 이와쿠니 기지를 오가는 고도 150m의 저공비행 훈련에 투입되며 이에 대해 오키나와 주민



들은 오스프리의 안전과 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함.

- 이날 후텐마 기지 주변에 500여명이 모여들어 "오스프리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외쳤고, 다른 주민들은 기노완시 별도 장소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음. 사키마 아쓰시(佐喜眞淳) 기노완 시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고 말함.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도 이날 기노완시청 옥상에서 오스프리가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비행시에 발생하는) 소리가 커서 주택지에 둘러싸인 (후텐마) 비행장에서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지 않은 와중에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추가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오스프리의) 훈련을 본토로 이전하는 등 전국적으로 부담을 나눠지겠다."며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아무쪼록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함.
- 오스프리는 지난 5년 간 58건의 추락 등 사고를 내며 '과부제조기'라는 별명까지 붙었음. 미일 양국 정부는 올 4월과 6월의 사고를 "기체 결함"이 아니라 인적 실수"라고 판정한 뒤 9월19일 '안전 선언'을 거쳐 후텐마 배치를 강행함. 미군은 2014년까지 오스프리 24대를 후텐마에 배치할 예정임. 후텐마 중형 수송 헬기(CH-46) 부대 2곳 중 한곳은 오스프리 부대로 개편됐음.

● 일본의 센카쿠 불법 편입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개제한 미국 신문에 총영사관 반론(10/3, 산케이신문)

- 뉴욕의 일본 총영사관은 2일, 오키나와현 · 센카쿠 제도(중국명 · 조어도)를 둘러싸고, 미국 신문 뉴욕 · 타임스(전자판)의 의견란에 "일본이 불법으로 편입했다" 라고의 대만의 연구자의 투고가 게재되었던 것에 대해 "중요한 잘못이 있다"라고의 반론을 카와무라 야스히사 수석 영사 명으로 투고함.
- 대만의 연구자의 투고는 지난 달 19일에 동지 전자판에 게재되어 일본과 중국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는, 1895년의 조어도 · 센카쿠 제도의 불법 편입의 배경에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계속 숨기며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이것에 대해, 카와무라씨는, 일본 정부의 종래의 주장을 나타내며 "센카쿠 제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혐의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반론함. 과거에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일본 령으로 인정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덧붙였음.

바. 미 · 러 관계

● <푸틴, 옛 소련 중앙아 주도권 회복에 총력>(10/5,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때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 같은 푸틴



의 전략은 중앙아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로 구체화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아 국가 키르기스스탄과 현지 주둔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러시아 기지를 세우기로 합의한 데 이어 5일(현지시간)에는 또 다른 중앙아 국가 타지키스탄 내 러시아 군사기지를 2042년까지 연장 주둔시키기로 합의함.
- ◇ 러군 기지 2042년까지 연장 주둔키로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를 방문해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과 회담하고 기지 주둔 연장에 합의함. 양국 국방장관은 두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 협정에 서명함. 협정은 오는 2014년 종료되는 타지키스탄 내 러시아 제201 군사기지의 주둔 기한을 204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 수석)은 밝힘. 양측이 합의할 경우 주둔 기한을 추후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러시아는 기지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우샤코프는 "협정은 기지 임대료와 관련 러시아에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을 담고 있다"며 "약간의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무료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함. 협정은 2014년 종료되는 기지 임대 계약을 대체하기 위한 것임. 우샤코프는 동시에 기지 주둔 러시아군이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면책 특권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함.
- ◇ 국외 최대 러시아 육군 기지 = '제201 기지'는 러시아가 국외에 유지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육군 기지로 약 6천800명의 병력이 머물고 있음. 기지는 타지크 수도 두산베와 쿠르간튜베, 쿨라베 등 세 도시에 분산 주둔하고 있음. 러시아와 타지크는 2008년부터 기지 주둔 연장 협상을 벌여왔음. 협상은 한때 타지크 측이 기지 주둔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임대를 유료화하는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함. 타지크 측은 기지 임대료로 연 2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양측은 타지크 내 러시아 기지가 러시아뿐 아니라 타지크에도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타협책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는 타지크에 별도의 주둔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타지크에 공급하는 무기 가격을 할인해주고 타지크군 장교들을 러시아 군사아카데미에서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러시아는 2014년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뒤 남부 국경 지대 및 인접한 중앙아 지역의 안정 확보와 옛 소련 권에 속했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군 기지 주둔 연장을 희망해왔음. 우샤코프는 "기지 협정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타지크 방문에서 가장 큰 성과"라며 "협정은 중앙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 확보를 위해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서"라고 강조함.
- ◇ 키르기스엔 새 러군 기지 건설합의 =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또 다른 중앙아 국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



해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키르기스에서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고 대신 러시아 군사기지를 주둔시키기로 합의함.

- 양국은 이날 체결한 협정에서 2017년부터 15년 동안 러시아 군사기지의 키르기스 주둔을 허용하고 양측이 합의할 경우 주둔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 대신 러시아는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키르기스에 제공한 1억8천800만 달러와 3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함. 아탐바예프는 푸틴과의 회담에서 비슈케크 인근 마나스 공항에 주둔중인 미군 기지를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14년 이후에 반드시 폐쇄시키겠다고 확인함. 2001년 설립된 마나스 미군 기지는 미군의 아프간 내 대(對)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물자 및 병력 수송센터 역할을 해왔다. 마나스 기지에는 약 1천500명의 미군 및 민간인 지원요원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사. 중·일 관계

● 中외교부, 日마에하라 발언 비판(10/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민주당 정조회장의 센카쿠 관련 발언을 비난하고 나섬.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자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마에하라의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마에하라 정조회장이 전날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센카쿠를 훔쳐갔다는 중국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임.
- 홍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포함한 일부 일본인들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마에하라의 발언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함. 홍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줄곧 중일 관계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다"며 "일본 각계 인사들이 중일 관계의 큰 틀에서 출발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으로써 중일 관계를 정상적 발전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자"고 촉구함.

● 中 동해함대, 해·공군 실 사격 훈련(10/1, 연합뉴스)

- 중국해군 동해함대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무력 시위성 해·공군 합동 실 사격 훈련을 함.
- 1일 해방군보에 따르면 동해함대 소속 전투기, 폭격기와 구축함, 유도탄정이 중추절(추석)인 9월 30일 동해 모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벌임. 이날 훈련은 신형 전투기들이 가상 적진인 한 섬에 접근해 정밀 폭격을 가하는 것으로 시작됨. 이어 폭격기 편대가 고공에서 용단 폭격을 퍼부었고 원거리의 구축함들은 함포로 지원 사격을 함.
- 중국 TV들은 항공기 폭격과 함포 사격, 가장 적진인 무인도에서 화염이 솟아오르는 화면을 생생하게 전함. 이날 훈련에는 '바다의 소리 없는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의 스텔스 유도탄정도 참가해 목표 함정에 유도탄을 발사해 명중시킴.
- 훈련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음. 그러나 훈련 지휘관이 동해함대



한샤오후(韓小虎) 부사령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대규모 전력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측함. 중국 군부는 센카쿠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각종 실전적인 훈련과 위협성 발언으로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

- 국방부 양이권(楊宇軍)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중국 군대는 상시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해상, 공중에서의 돌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함. 중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보안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자 최근 호위함 2척을 센카쿠 80해리까지 접근시키기도 함.

● 체코에서도 반일 데모 중국계 주민, 일본기 짓밟아도(10/4, 산케이신문)

- 체코의 수도 프라하 중심부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3일, 현지의 중국계 주민등 약 100명이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중국명·조어섬)의 국유화에 항의하는 데모를 함. 체코 경찰이 대사관을 경비하여 큰 혼란은 없었음.
- 대사관에 의하면, 데모에 참가한 사람들은 "조어도는 중국의 영토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나 중국 국기를 들고, 약 2시간에 걸쳐서 동시에 구호를 외침. 일본 국기를 짓밟는 참가자도 있었다고 함.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이탈리아, 헝가리-에서도 중국계 주민 등에 의한 반일 데모가 일어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